

우주개발 대통령기록물 원문 30점 온라인 공개

정책부터 누리호 개발까지 4가지 주제로 나눠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4일부터 대행민국 우주개발 30년의 꿈을 주제로 우주개발 관련 대통령기록물 원문 30점을 홈페이지(www.pa.go.kr)에 공개한다.

이는 지난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발사 성공과 8월 5일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은 △ 우주개발 정책 △초기 위성개발과 우주센터 건설 △한국 우주인 배출 △나로호와 누리호 개발 등 4개 주제로 나눠 1993년 과학로켓이 발사부터 2022년 누리호 발사까지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우주개발 관련 기록물들이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은 1993년 작성한 '21세기에 대비한 항공 우주산업의 육성방안'이 처음이다. 이 방안은 1989년 출범한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2000년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와 다목적용 저궤도 위성기술을 개발해 우주산업 대열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 차원의 첫 우주개발 계획은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1996)'이다. 이 계획은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향후 20년간 4조800억원을 투자하고 400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19기의 과학로켓과 우주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내용

이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을 토대로 한 국항공우주연구소가 우리나라 항공우주업무를 주도하게 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달탐사 위성을 자체 발사하기 위한 달 탐사위성을 개발하고 위성 및 우주 발사체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세계 7위권의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를 삼았다. 이는 7대 우주강국 요약(200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2013)'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2022)'의 개발 계획도 볼 수 있다.

나로호 개발사업 보고는 2012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한·러 기술협력 배경 및 성과, 실패 원인 규명·점검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개선·보완 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나로호 3차 발사 기준일과 발사 기준 시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도 있다. 바로 '나로호 3차 발사 재추진(3차) 기준일 확정' (2013)으로,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는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발사 기준일과 발사 기준 시각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부에서 관찰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나로호 성공 후 정부가 누리호 개발을 추진한 내용은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016)에서 볼 수 있다. 이 계획은 대통령자문기획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201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단계로 나눠 1조9572억 원을 투자해 1.5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 등이 담겨 있다.

또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 관련 기록이 있다. '한국우주인 배출사업 관련(2006)'은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호에 탑승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 후 지상과 교신 및 무중력 상태에서 물리적 반응 등 실험을 수행한 후보를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우주인 관리 후속대책(2008)과 '우주인사업에 의한 국민의식변화(2008)'에는 정부가 우주인 배출 후 과학기술에 대한 호감도와 이공계 전공 선호도가 대폭 상승하는 등 우주인 사업이 투자 대비 획기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우주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부자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내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1998년부터 5년간 개발한 국내 최초의 우주과학실험용 과학기술위성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치된 국가우주위원회, 국내 개발 발사체를 자체발사하기 위한 우주센터 건립 등과 관련한 기록물도 볼 수 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공개 기록물이 지난 30여년간 추진된 우주개발의 여정과 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기록물 발굴과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항만항역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 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 점검 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 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뉴스



새만금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김규현 새만금청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새만금 3센타와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를 둘러보고 있다.

"친명계 최고위 후보 줄 세우기, 계파 세몰이"

'최고위원 도전' 민주 고영인 의원, 이재명 당대표 후보 비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고영인 후보(사진)가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을 비판했다. 이 후보가 이른바 친명 마케팅에 나선 최고위원 후보들을 몰고 다니며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등 불공정 게임을 하면 집단지도체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후보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대영" 기조 속에 자타공인 우리 당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 중요자산인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토크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지지자들을 몰고 다니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팬미팅이다. 이 자리에는 어김없이 소위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함께해 줄 세우기, 계파 세몰이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취지는 당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한 최

당이 진정한 통합에 이를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당심과 민심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의 외연을 확대해 전국경선회할 수 있을까? 당내 시분오열된 길등을 어떻게 하면 봉합이나 아합이 아닌 진정한 통합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중요하다"며 "새 지도부의 시명이 민주당의 혁신과 진정한 통합, 미래비전 시장을 통한 수권정당 준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고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지자 중심으로 모이고 최고위원 후보 중 친명계로 분류되는 4명과 함께 다니며 계파 세몰이 형태로 하는 건 비합리한 선거 형태가 아니다"라며 "유력한 당대 후보로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아니다. 향후 통한 의지가 있는지, 당에 대한 걱정, 당 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니라는 문제제기"라고 덧붙였다.

국 연방하원의원단을 이끌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다. /뉴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회담... 안보·경협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국회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고 국회의장실이 1일 밝혔다.

양국 의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력 및 기후위기 등의 현안을 놓고 약 50분간

회담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갖는다.

이후 양국 의장은 국회 사령부로 이동해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미

항만안전특별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오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전국 400개 항만항역 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